

위반건축물 예방가이드북



영등포구

Jewelry Island. TH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목차

CONTENTS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

1. 위반건축 행위란?	3P
2. 위반건축 행위의 유형	3P
3. 위반건축 행위 사례	4P - 8P
4. 자주 듣는 질문(Q&A)	9P
5. 당부 말씀 (꼭 알아두세요!)	9P
6.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10P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안내

11P

냉난방 및 환기시설 배기장치 설치 안내

12P

고시원 무단용도변경 사전예방 안내

13P

안전한 가로환경 만들기

14P

“모두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건축문화 만들기”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

1 위반건축 행위란?

- 건축법령에 정한 허가(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신축, 증축 등)하거나 용도변경·대수선하는 행위입니다.
- 사용승인을 받은 대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건축법령 위반 행위입니다.
※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사고, 손해 발생 시 그 책임은 건축주(관리자/소유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위반건축 행위의 유형

- 허가(신고) 없이 건물의 옥상, 층별 면적 차로 발생되는 공간이나, 마당, 주차장, 건축선 후퇴부분, 나대지 등에 조립식 패널, 경량철골, 컨테이너 등을 사용하여 기둥(또는 벽)과 지붕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무단
신축·증축

일조권 위반 및 무단대수선

- 건축물 상층부 일조권 제한 등으로 후퇴한 부분[예:다세대 주택의 베란다]에 경량 철골, 조립식패널 등을 설치하는 행위
- 건물의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주계단),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 불에 견디도록 한 외벽 마감재 등을 임의로 증설·해체·변경하는 행위

무단용도변경
및
공작물축조신고
위반

-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를 허가(신고) 없이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예 : 근린생활시설(사무실, 고시원 등)을 주택으로 변경]
- 공작물 축조신고를 이행해야 하는 공작물 (대형 광고판, 높이 2m이상의 담장 등)을 무단으로 축조하는 행위

조경훼손 및 기타 위반

- 허가(사용승인) 받은 조경(시설)면적을 훼손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물건적치, 창고 및 분리수거장 조성 등)
- 다중주택, 고시원 내 개별 취사시설(싱크대)을 설치하는 행위
- 건축선(후퇴선, 한계선) 또는 도로경계선을 침범하여 보행 및 통행장애를 유발하는 행위

3 위반건축 행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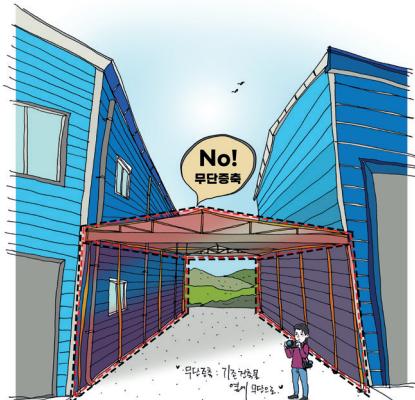
01 | 사례

무단증축

위반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늘리는 행위



▲ 베란다(샤시,판넬)를 무단으로 증축



▲ 필로티 내 주차면 및 유휴공간 (창고, 관리소 등)을 무단으로 증축

02 | 사례

무단가설건축물 축조

천막·파이프 구조물, 컨테이너 등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축조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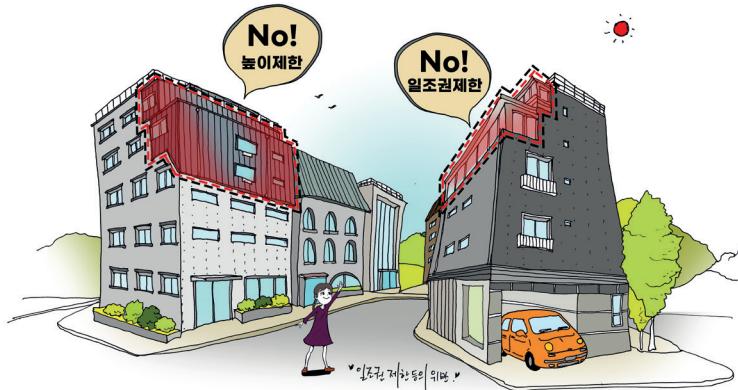
▲ 천막 구조물(파이프)을 무단으로 축조

▲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축조

03 | 사례

일조권 제한 등의 위반

주로 건축물 상층부 후퇴한 베란다에 허가(신고) 없이 무단 증축하여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



▲ 후퇴된 부분에 무단 증축하여 일조권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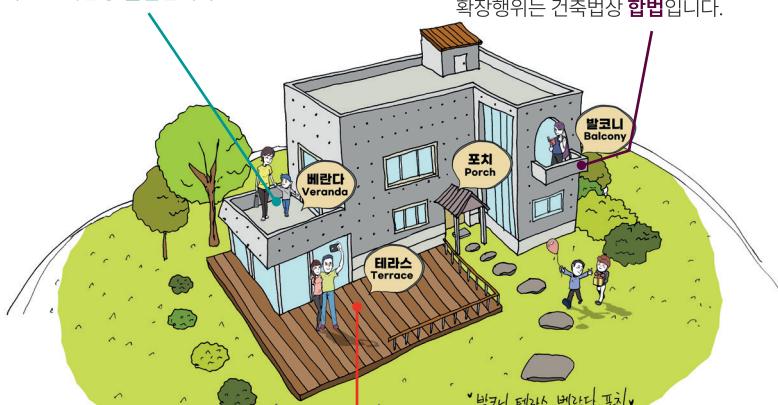
베란다·발코니·테라스 차이 꼭 알아둡시다!

베란다 확장불법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의 차이로 발생하는 공간으로
아랫집의 지붕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확장행위는 건축법상 불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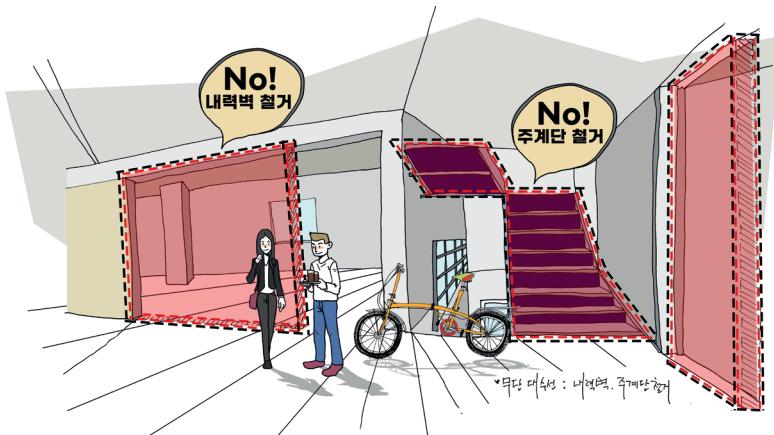
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원층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주택용도에 한해
확장행위는 건축법상 합법입니다.



테라스 실내의 연장선으로 정원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무단으로 수선 또는 변경하거나 증설 또는 해체하는 행위



▲ 주택(벽돌구조)의 주계단 및 내력벽 철거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가구(세대)간 경계벽을 무단으로 수선 또는 변경하거나 증설 또는 해체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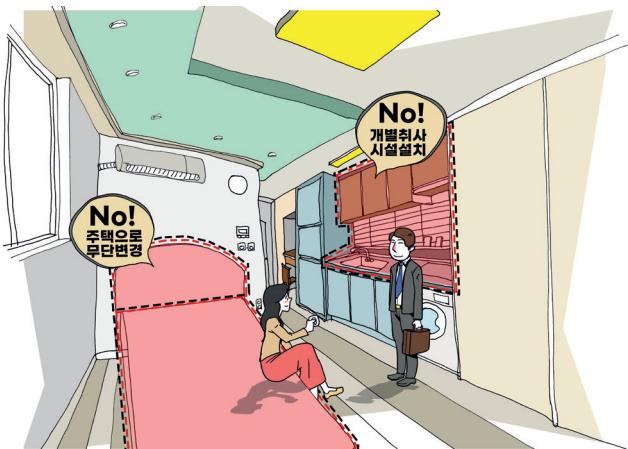


▲ 다가구주택에서 가구 간 경계벽을 무단으로 수선 또는 변경(가구수 증설)

05 | 사례

무단용도변경

허가(신고) 없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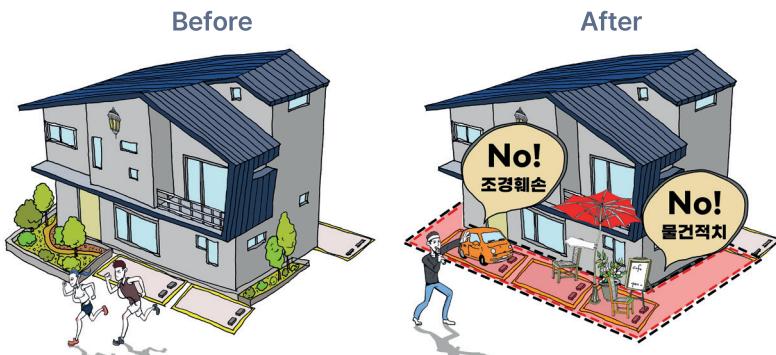


-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소매점, 의원 등)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
- ▲ 다중주택, 고시원 개별취사시설(씽크대)을 설치하는 행위

06 | 사례

조경훼손 및 주차장 전용

허가(사용승인) 받은 조경(시설)면적 및 부설주차장을 훼손 또는 변경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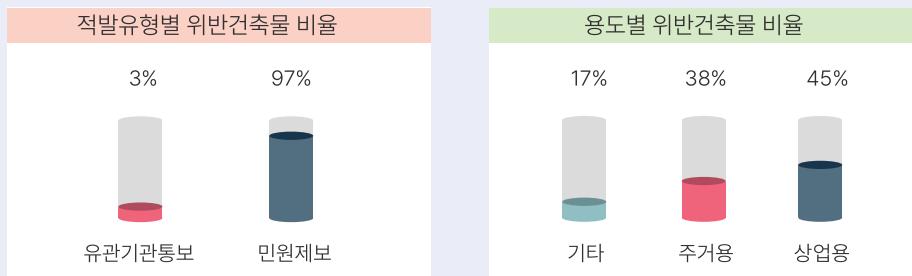
- ▲ 조경(시설)면적을 훼손 또는 변경하는 행위(주차면 조성, 수목 및 시설물 철거 등)
- ▲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물건적치, 창고 및 분리수거장 조성 등)

위반 유형 분석(2020~2022년 통계)

구분	위반종류	위반유형	증축위치	비율
주택	증 축	일조에 의한 높이 제한으로 중축불가부분	옥상위	70%
			테라스	
			베란다	
			발코니	
			기타	
		기타증축	대지내 공간	10%
			옥상 위	
			노출된 계단실 상부	
			도로 후퇴 부분	
			주차장 위	
	용도변경	주택 ⇒ 균생		19%
	대 수 선	가구수증가		1%
		내력벽 철거		
주택외 시설	증 축	대지 내 자투리 공간 도로 후퇴 부분 대지 내 여유 공간 노출된 계단실 상부 주차장 옥상 노대	대지 내 자투리 공간	87%
			도로 후퇴 부분	
			대지 내 여유 공간	
			노출된 계단실 상부	
			주차장	
			옥상	
			노대	
	용도변경	기타		10%
		근생 ⇒ 주택		
		근생 ⇒ 위락시설		
	대 수 선	기타		3%
		내력벽 철거		

- 주택, 주택 외 시설 위반유형에서 **무단 증축**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해마다 그 적발건수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 규모가 크지 않고 '이정도 쯤이야...'라는 생각에 무단 증축이 위반행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공사전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무리 작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라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일부 건축업자 등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행정절차를 따라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적발현황



4 자주 듣는 질문(Q&A)

· 내가 지은게 아니다?

前 소유자가 위반부분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現 소유자에게 승계되므로 반드시 위반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건물을 매입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왜 지어졌을 때 바로 단속을 못했나?

적발은 진정민원, 항족, 타부서 통보 등에 의해 조치되는 만큼 즉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특히 항공 활영의 경우 지어진 지 2~30년 전 것도 적출되고 있으므로 위반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 공사업자가 괜찮다고 했다?

사전에 반드시 관련부서에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 주십시오.

· 재개발/재건축 개발(예정)지역이다?

개발(예정)지역에서도 위반행위는 관련법령에 의거 행정조치 되고 있습니다.

5 당부 말씀 (꼭 알아두세요!)

· 허가(신고) 없이 건축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 시정완료 될 때까지 매년 2회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됩니다.
- 사법기관에 고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강제철거(행정대집행) 될 수 있으며 비용은 건축주(관리자/소유자)가 부담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재산권 행사 및 각종 인허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신청시 제한을 받습니다.

·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을 받지 않습니다.

근래 공무원을 사칭하며 “위반건축물을 양성화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의 보도가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 반드시 구청 건축과나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차 말씀 드리지만,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 건전한 건축행위를 위해 실천합시다.

- 건축과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 및 신고된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위반사항 유무, 건축허가 사항 등을 문의하시면 담당 직원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 건축과 Tel.02-2670-3694

6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A 건축물대장

- 건축물의 층별용도 및 주요구조
- 건축물 대지면적, 연면적 및 건폐율, 용적률
- 건축물의 층수, 높이
- 건축물대장 위반표기 유무 확인

B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표제부-부동산의 주소, 면적, 용도, 구조
- 갑구-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 기재
가등기, 예고등기, 압류, 경매 등
- 을구-제당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등

A.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여부확인

B.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D.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C. 기타공부

-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확인
- 각종 공법상 규제사항 확인

-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등
- 토지면적, 지목, 대지경계 등 확인

D.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기타공부 C

공부와 현황 과의 일치 여부확인이 중요합니다.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안내

1 위반건축물 시정방안

자진정비

- 위반건축물은 자진정비(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 자진정비 시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적발 후 신속하게 자진 정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이행강제금은 벌금이므로 부과된 후에는 자진정비가 되어도 부과된 금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 시정대상자 : 건축주 등(건축주,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추인절차 이행

- '추인'이란 건축법 및 관련 법규 등 불법구조물이 현행법에 적합할 때에 한하여 행정조치(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납부) 후 허가 또는 신고처리를 통해 적법화 하는 방안
- 신청대상자 : 건축주 등(건축주, 관리자, 토지소유자 등)

* 건축사에게 의뢰하여 도면작성 및 관련법규 등 검토 필요

2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절차

사전통지

시정명령
(고발예고)

시정촉구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은 시정 될 때까지 '매년 2회' 반복적으로 부과·징수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재산권 행사 제약 및 각종 인허가, 영업허가등에 제한이 됨.

3 이행강제금 체납 징수 절차

이행강제금
부과

독촉고지서와
압류예고문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

압류통지서
통보

체납시



냉·난방 및 환기시설 배기장치 설치 안내

1 관련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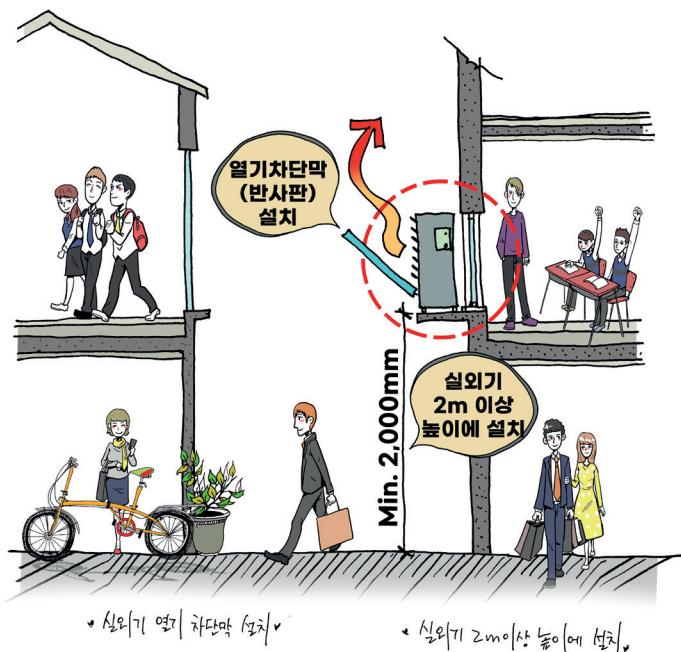
2 대상내용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

3 설치방법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할 것.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고시원 무단용도변경 사전예방 안내

1 위반건축물

다중생활 시설 (고시원)이란?

- 다중생활 시설(고시원업의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 별 건축물의 종류)[별표1]에 의하여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개별취사 시설(가스레인지, 싱크대, 취사를 위한 수전·가스 배관 등)설치가 불가한 시설로 규정되어 있음

'고시원'불법용도 변경이란?

- 개별취사 시설(가스레인지, 전기국밥, 싱크대, 레인지후드 등)을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조하여 원룸(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 후 임대 및 사용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무단 증설하여 허가 받은 호실(칸막이)보다 많은 호실로 불법 대수선 후 주거용 등으로 사용

시정대상자

- 건축주 등
(건축주,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적발사례 및 처분사례

위반사항 적발사례

대림동 00-00번지 00역 인근
'ㅁㅁ고시원'은 2014년 취사시설을
설치한 후 원룸으로 불법 용도변경 후
직장인들에게 월세로 임대하여 사용하다
적발됨

당산동 000-0번지 00역 인근
'△△고시텔'은 2016년 고시원으로
허가 후 칸막이 증설을 통해
숙박시설로 불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하여 월세로 계약하였으나
세입자의 적법여부 확인신고로
적발되어 시정 조치

처분사례

적발 후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으며
미시정으로 2015년 이행강제금
2,800만원을 부과예고 하였으며
자진정비 후 시정완료 함.

세입자 퇴거 및 원상복구를 위한 칸막이
해체공사, 취사시설 철거 공사를 보름에
걸쳐 공사 후(건축주 주장 공사비
약 1,000만원 소요)시정완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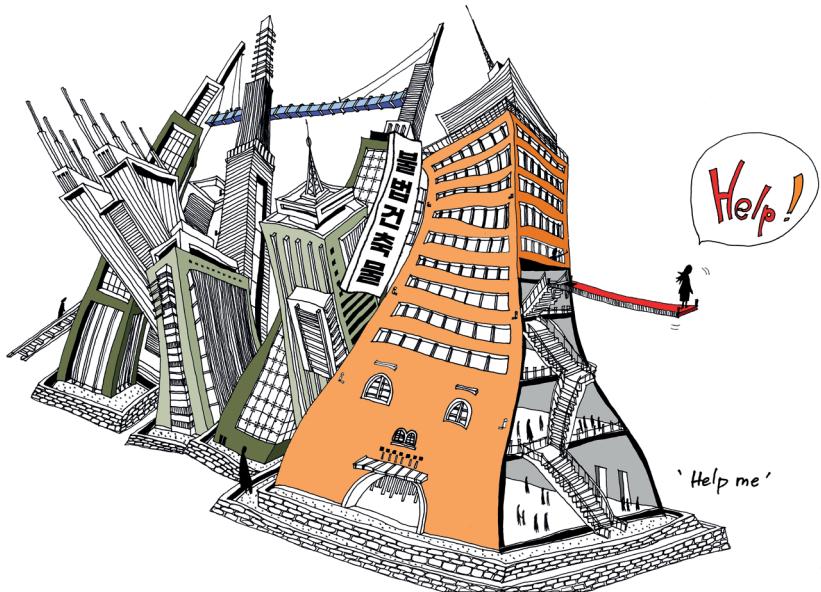
안전한 가로환경 만들기



- 점포앞 데크설치, 물건적치, 입간판(광고물)돌출, 횟집수조, 판매대, 차양막(어닝) 등이 건축선 침범 및 보도 무단점용 행위
- 건축물의 측면 및 후면에 창고, 보일러실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행위
- 건축물 외벽에 에어콘 실외기 차단막 미설치 및 돌출로 인한 보행장애 유발 행위
- 조경 및 공개공지의 훼손 및 변경,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행위

건축과 2670-3694
주택과 2670-3649

가로경관과 2670-3784
주차문화과 2670-3375



“모두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건축문화 만들기”

* 민원상담 '나눔마루' 운영안내

영등포구청 건축과 내 '나눔마루' 상담코너에서
전문위원(건축사)이 매일(휴일제외) 오후(2시~5시)에
민원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이드북 다운로드 안내

기타 관련자료는 영등포구 홈페이지에서
'위반건축물'로 검색하여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예방가이드북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Tel.02-2670-3114
www.ydp.go.kr